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 '살인죄 무죄' 다친 조리사 두고 나온 기관장은 '유죄'



세월호 재판 법정 표정

“판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관대한 줄 몰랐네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관련기사 6면>

재판장이 “피고인 이준석을 징역 36년에 처한다... 청해진해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며 승무원 15명과 청해진 해운에 대한 선고를 마치는 순간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장이 사건 경위·쟁점 등을 설명하는 1시간 30분 가량 무속 잡고 있던 분노와 고통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불쌍한 우리 아이 어떻게 해. 아이들 돌려주세요”라며 소리 내 영영 울었다.

법의 잣대는 냉정하리만치 ‘엄격’했다.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설명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법 감정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바다에 묻은 슬픔을 덜어주기에는 한참 모자란 듯 가족들은 “이게 뭐냐”며 오열했다. 가족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한 듯 숨을 고르는 방청객도 눈에 띄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11일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재판 전부터 ‘이론의 여자 없는 사형감’이라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승무원 14명 5~30년 선고
유가족들 분통
“304명 희생...이건 아니죠”

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았고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단형의 최고형”이라며 3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애초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적용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명확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합리적 의심이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선장이 “승객들을 퇴선 시키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살인죄가 적용됐던 1등 항해사 김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기관장 박씨의 경우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방치한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인정, 30년형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한 곳만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 굳은 표정으로 일어서 선고 결과를 들은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모든 피고인들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재판은 지난 4월 16일 이후 210일째 1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고 피고인들이 떠난 법정엔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한 동안 멈추질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장의 안도·아버지의 눈물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이 선장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9명 남겨두고...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

실종자 가족들 중단 요청

정부는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수중수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정중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수색 관련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

산부 장관을 통해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수색 종료는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0일 만이다.

진도에 머물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수중 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서도 “갈수록 수색 여건이 악화돼 잠수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처럼 누군가 또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분들이 나오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

수중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어 “수중수색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가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야한다”며 “인양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가족들이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곡성 오리농 AI 4만 마리 살처분

보성 토종닭 농가 의심신고

전남도는 11일 “10일 오후 곡성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오리 4만여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보성에서는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초에 발생한 AI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는 기세여서 전남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곡성군 겸면의 1만여마리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진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가 카우던 1만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예방적 조치로 주변 오리 농가의 3만여마리 오리도 함께 살처분했다.

보성에서 토종닭 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이날 오전 AI 의심 신고를 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12일께 나올 전망이다.

전남도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닭·오리농가가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추가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오리·닭 사육농가가 방역차단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보조하고, 50%를 용자해줄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능 D-1 수험생 대비 요령 ▶7면



컬처&피플 철학자 최진석 ▶17면

제8회 해원기념강좌
11월 12일(수)
10:40~14:00
광신대학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000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